

KCC-현대, 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현대, KCC에 지분경쟁 중단 강력요구 ... 범 현대가 중재전망 불투명

3월로 예정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를 앞두고 KCC와 현대가 소액주주 표심잡기의 핵심 열쇠인 주주명부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CC는 주주의 권리임을 내세워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KCC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에 주주명부 공개를 요청했으나 현대가 받아들이지 않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법상 주주는 보유주식수와 상관 없이 해당기업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KCC는 한때 주주명부 열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주총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적 대응보다는 현대에 지속적으로 명부 공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이 주주명부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주주 신원 및 주주별 주식 보유 현황이 담긴 주주명부가 있어야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끌어안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늦어도 주주총회 소집 2주 전까지는 주주총회 소집통보서를 각 주주들에게 보내야 하며 소집통보서가 발송된 이후부터 합법적인 의결권 위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KCC는 5%를을 위반한 지분 20.78%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에 따라 지분율이 현정운 회장(30.05%)보다 한참 낮은 16.11%로 곤두박질 친 상태여서 3월 주주총회에서 범 현대가와 함께 소액주주를 끌어들이는 일이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로서도 KCC가 지분 8% 공개매수 방침을 발표하며 현대 경영권 점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선언한 만큼 선뜻 주주명부를 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지분율에서 KCC를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범 현대가 거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가운데 눈 뜨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빼앗길 수 없는 입장이며, 더욱이 주주명부 공개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범 현대가가 이병규 전 사장 등 3명을 중재역으로 추천한 데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모임도 조만간 지지대상을 선정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액주주들을 잡기 위한 양측의 살바싸움도 가열될 전망이다.

KCC 관계자는 “현대 측이 주주의 엄연한 권리인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특히 KCC로서는 명부 비공개로 소액주주 권한 위임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반발했다.

<Chemical Journal 2004/02/18>